

2008.9.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이번 시험은 꽤 어렵다고 해야할 것 같다. 암기된 단어가 별로 도움이 안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험에서 행정학 점수를 경쟁자와 얼마나 벌려 주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합격에 필요한 것은 시험이 쉬웠다/어려웠다가 아니라 합격권 수험생들보다 한두 개 더 맞추었느냐에 있기 때문에 시험 후에 '뭘 이래'라면서 짜증낼 필요가 없다.

수험생의 입장에서야 난이도가 높은지/낮은지에 따라 변별력이 있다/없다는 평가를 하려 하겠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인사행정에서 배웠던)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변별력을 고려해서 평가하게 된다. 난이도에서 보는 것은 높다/낮다의 문제가 아니며 정규분포를 이룬다면 변별력은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4월 국가직 시험보다는 좋은 문제라 하겠다. 사실 4월 국가직 시험은 열심히 했는지와 무관하게 시험기간과 무관하게 행정학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현 공무원 시험이 기출타당성이 높은 과목들은 아니지만, 업무에 필요한 이해력 등과 관련해서도 단순 암기를 묻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도 4월 국가직 시험보다는 좋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문제에서 문맥 없이 나온 지문들은 시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다.

선발인원이 작은 상태에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면, 또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려 한다면 단순암기력보다는 이해력과 응용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자는 변별력이 없다고 할 것 같지만, 쉽게 낸다고 혹은 어렵게 낸다고 변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인 것이다. 물론, 행정학이 공무원 시험과목 중에서는 어려운 과목이고, 이해위주의 수업이라 하는 것 대부분이 암기식이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난해한 책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점, 논리와 체계를 안다면 재미있고 쉬워진다는 점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제에서 수업 중에 설명하지 않은 주제는 없었다(조직문화 문제도 최근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 두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다). 문제 중 일부는 개념을 약간 틀었지만, 개념을 틀어서 냈다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과연 지문의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8번 문제 등)가 관건이 된다. 다른 수험서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을 것이다. 틀리라고 출제된 문제는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번 문제 중에서 대표관료제의 경우에도 시험마다 표현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 년 공부를 되돌아 보면서, 자신의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기 바란다. 이전 시험에 대한 시험평에서는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사기진작보다 더 절실한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남과 같은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수험 및 합격 이후의 길에서도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대신,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어쩌면, 가장 하찮은 존재의 하나일 수 있으나,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

(아래 책 페이지는 공부했던 분들의 편의상 넣었으며, 2009년판을 기준으로 했다.)

- 강제명(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01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예산은 영기준예산과는 달리 결정의 흐름이 하향적이다.
- ② 영기준예산에서는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③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도출이 어려울 경우 합리모형의 적용이 곤란하다.
- ④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에 더해 정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정답 ④

- ③④ 합리모형은 주어진 목표에 대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목표-수단의 연계분석을 강조한다면, 점증모형은 공공예산이 추구해야 할 가장 주된 가치를 책임성의 확보에 둔다. 즉, 점증모형은 예산의 정치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조정 및 타협을 중시한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EBS 푸른행정학, pp.721-722).
- ①②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모형에 입각한 예산결정을 특징으로 하지만, 전자는 목표-수단의 연계분석과 계량분석을 중시한다면, 영기준예산제도는 대안 패키지를 만들고, 각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을 배분한다. 전자는 중앙집권적이라면, 후자는 분권적이며 참여적이다(EBS 푸른행정학, p807, p.810).

0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결처분	ㄴ. 예산심의	ㄷ. 기금의 설치·운용
ㄹ. 조례제정	ㅁ. 청원처리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선결처분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EBS 푸른행정학, p931).

- 조례 제정·개폐
- 예산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 기금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구·읍·면·동·리의 변경, 폐치·분합(행자부 승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 인원의 범위, 행정기구의 설치, 자치단체공무원 정원,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 설치(행자부 승인) 등

0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

정답 ①

근평모형은 평정 초점에 따라 크게 자질(trait), 행태(behavior), 과업(task)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질에 대한 평가로 도표식평정척도법이다(EBS 푸른행정학, p.659이하).

자질(trait)	• 도표식평정척도법과 강제배분법, 체크리스트법과 강제선택법
행태(behavior)	• 중요사건 서술법, 행위기준평정척도법, 행위관찰척도법, 역량평가, 다면평가
과업(task)	• MBO, 직무성과계약제

설문은 이 중에서 행태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등급을 나누어 평정한다는 점에서 사건 서술이나 행위 관찰이 아닌 평정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EBS 푸른행정학, p.660).

중요사건 서술법	- 평가자의 성과와 관련하여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성과와 그렇지 못한 성과로 나누어 기술. 피평가자의 예외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 - 구체적 사건을 바탕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 능력발전에 활용 가능
행위기준 평정척도법	-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 서술법을 절충한 방법으로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행동을 기술하고 성과차원의 척도를 매겨 분류한 방식 - 개인의 직무성결과 아닌 인성에 대한 평가경향을 방지할 수 있음.
행위관찰 척도법	행위기준평정법과 같이 직무성과와 관련 있는 중요 행위를 사전에 나열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빈도)에 대한 척도를 만들어 평가
역량평가	특정 직위와 관련된 계획수립, 고객지향, 팀육성 등과 같은 역량을 평가
다면평가	상급자 외 동료, 하급자, 고객에 이르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법

04 대표관료제의 한계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나.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ㄴ.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르. 채용 전과 후의 이해 관계 변화

- ① $\neg, \perp$
② $\perp, \exists$
③ $\perp, \sqsubset, \exists$
④ $\neg, \perp, \sqsubset, \exists$

정답 ④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표관료제의 특징과 (암기된 단어가 아닌) 한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설문은 모두 대표관료제의 한계와 관련된다. 대표관료제는 관료를 사회의 주요 구성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충원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사회세력의 축소판으로 관료제를 구성하려는 것이다(EBS 푸른행정학, p.614 이하).

대부분 시험서에 나온 대표관료제의 한계로는 아래의 내용들이 지적된다.

- 실적제 저해한다는 점(자유주의 원리에 어긋나고, 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저해한다)
- 재사회화의 미고려(설문의 ㄷ)
-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및 기술적 어려움(설문의 ㄴ)

이외에,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의 대안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관료제는 오히려 관료제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설문의 ㄱ, ㄴ, ㄷ은 개념 논쟁과 관련된다.

ㄴ의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문제는 킹슬리가 강조한 소극적 대표성에 대해서, 위에서 지적한 인적 구성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ㄴ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문제는 인적 구성상의 비례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용된 관료가 해당되는 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 문제 외에 정부의 대내외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대표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Chandler 등의 지적이다(EBS 푸른행정학, p.614). 즉, 대표란 전체 국민의 대표로 보아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론은 시민참여를 통한 외부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은 아니다. 내부통제를 강조해서 국민주권론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행정윤리도 국민주권론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확장해보자. 대표성에는 대표(trustee), 대리(deligate), 정당위임(madate), 직능대표 네 가지가 있다. 대의제에서 대표는 국민주권원리인 전체 국민의 대표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리는 인민주권원리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지역구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위임은 집권당이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직능대표는 대표관료제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05 정책실패의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성
- ② 문제의 유동성
- ③ 지나친 집권화
- ④ 정보나 자료 수집의 불충분성

정답 ①

정책실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EBS 푸른행정학, p.357).

- ㉠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못할 때, 정치적 합의가 부재하며 재원 동원이 어렵고,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적 가정이 불분명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지 못할 때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
- ㉡ 행정관리상의 문제, 집행담당조직의 구조, 행태 등의 문제는 정책실패를 야기한다.
- ㉢ 대상집단의 순응을 유도하는 데 실패하거나, 요구되는 행태가 불분명할 때 정책실패가 나타난다.
- ㉣ 사회경제적·정치적 여건의 변화는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행정의 3대변수인 인·구조·환경으로 나누는 경우, (1) 인간적 요인으로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비합리적 태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 (2) 구조적 요인으로는 집권적인 조직구조, 조직의 높은 공식성, 문제의 유동성, 정책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제약 등이, (3) 환경적 요인으로는 미약한 투입기능, 사회규범이나 관습의 제약, 비민주적 사회제도로 인한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지적된다.

참고로, 정책집행실패를 Sabatier & Mazmanian은 ㉠ 해결할 정책문제의 성격, ㉡ 법적 요인(정책의 내용), ㉢ 정치 요인(정책환경)으로 구분한다(EBS 푸른행정학, p.356).

이 문제에서는 ①이 인간의 인지적 측면이고, ②가 대상문제의 성격 혹은 구조적인 요인이고, ③과 ④가 조직구조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정답은 ①이 된다. 정답은 나오기는 하지만, 학자마다 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문제에서 명확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는 아니다.

06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②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 ③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정답 ③

- ① 대표관료제는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제도로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② 롤스는 원초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이 무지의 베일의 상황(불확실성)에 놓여진 경우 그 선택

은 자신의 손해를 피하려는 차원에서 최소극대화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③ 채권발행방식은 세대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평적 형평에 속한다.

④ 형평성은 기존의 행정이론이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효용만을 강조하게 되어, 정부 정책의 편익이나 비용이 특정 집단에 귀착되는 것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즉, 신행정학은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성으로서, 이는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강조한다(EBS 푸른행정학, p.241).

07 정책집단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와 정책집행의 용이성 정도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혜집단이 희생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 ② 희생집단이 수혜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 ③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 ④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각 집단의 조직화정도가 약할 경우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정답 ②

정책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용이성은 이해관련집단의 세력관계와 관련되며, 힘은 크기와 응집력과 비례한다. 만약, 비용집단이 강한 경우 정책집행은 이들의 반발로 인하여 용이하게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희생집단이 강한 경우 집행이 곤란하며, ② 희생집단이나 비용집단의 조직화가 약한 경우에는 정책집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EBS 푸른행정학, p.356. 참고로, p.312 논리와 동일).

08 다음은 조직문화의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 ㄴ. 조직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조직의 신념을 밝히는 정책
- ㄷ.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 ㄹ. 조직참여자가 상호작용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와 복종 등과 관련되는 의식(儀式)

- | | | | | | | | |
|---|---------|---|--------|---|---------|---|---------|
| | ㄱ | | ㄴ | | ㄷ | | ㄹ |
| ① | 지배적 가치 | - | 규 범 | - | 행태의 규칙성 | - | 철 학 |
| ② | 규 범 | - | 지배적 가치 | - | 철 학 | - | 행태의 규칙성 |
| ③ | 규 범 | - | 철 학 | - | 지배적 가치 | - | 행태의 규칙성 |
| ④ | 행태의 규칙성 | - | 철 학 | - | 규 범 | - | 지배적 가치 |

정답 ③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Schein의 기초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영향으로 경쟁적 가치접근법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는 점에서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Schein은 조직문화에 관한 기초적 개념으로 문화의 계층을 이루는 전제, 가치관, 인공물·행태로 구분하는 데, 이 문제는 전제에 관한 것을 규범으로, 가치관을 철학과 가치관으로, 행태로 묻고 있다. 규범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전제(당위)에 관한 것이며, 철학과 가치관은 조직구성원들이 상황·행위·대상 등에 대한 판단·평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조직의 목표·이념·표준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패턴·인공물 : 핵심요소인 가치관과 기본전제의 영향을 받아 겉으로 드러난 표상을 지칭한다(EBS 푸른행정학, p.32).

수험생의 입장에서 풀어 보자. ㄹ이 행태라는 것은 알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ㄴ과 ㄷ이 된다. 이때, 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신념으로 ㄴ이 철학이라는 것이 예상되고(철학이 보다 근본적이라면, 가치관은 행위의 직접적 준거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ㄱ은 어떠한 이론적 혹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은 아니며, 구성원들에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예컨대, 살인해서는 안된다와 같이)이다. 즉,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형성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09 자본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예산제도는 재정의 기본구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시설투자사업별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나 조직 및 품목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 ③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④ 재원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하여 충당한다.

정답 ②

정부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는 복식예산제도를 말한다. 스웨덴에서 건전재정의 테두리 내에서 경제안정화 기능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지방정부의 자본예산제도는 공채 발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계획적 수행을 위한 제도로 발달되었다. 자본지출은 ㉠ 장기적 계획을 요하며,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부 효과를 유발하고, ㉢ 미래 운영비를 초래하며, ㉣ 사업별 투자계획서를 요구하며, ㉤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집행된다(EBS 푸른행정학, p.817).

- ① 자본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을 투자적 지출과 소비적 지출로 구분함으로써 재정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③ 재정정책이나 화폐금융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가능케 한다.
- ② 자본예산제도는 사업별 분류방식이 아닌, 경제성질별 분류에 속한다. 예산구조에서 세부내역에 대한 분류에는 기능, 사업, 그리고 품목별 분류를 결합될 수 있다.

10 사바스(E.S.Savas)의 기준에 따른 공공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민간투자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하면 공유재(common-pool goods)라고 볼 수 있다.
- ③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재(private goods)이다.
-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요금재(toll goods)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정답 ①

사바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EBS 푸른행정학, p.95).

배제성 \ 경합성	비경합성	경 합 성	
비배제성 (외부성야기)	공공재 (국방, TV, 등대, 치안)	공유재 (공기, 바다의 물고기)	무임승차 → 직접공급 → 규 제
배 제 성	요금재 (도로, 전기, 수도 ; SOC)	민간재	
	↓ 자연독점(규모경제, MC=0) 공적 공급, 규제		

- ①의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공공재를 지칭한다.
- ② 공유재는 경합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다.
- ③ 시장재, 즉 민간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높은 재화다.
- ④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 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정답 ①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거버넌스의 기본 내용을 안다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②와 ③은 기초적인 내용이며, ④도 기본적인 내용이다(EBS 푸른행정학, p.178 이하). 즉,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되었으며, 이때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밝힐 필요가 제기되었다는 것,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이 정부와 민간 상호간의 기능재조정과 정부역할을 노정기에 방향잡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맞는 지문이라는 것은 알 것이다. 즉, 처음 보는 지문은 아예 무시하고 나머지에서 답을 찾고, 나머지가 맞는 지문이면 처음 보는 지문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①의 발전적 거버넌스의 개념이다. 거버넌스 구분이 다양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meta-거버넌스 / Network 거버넌스 / 발전거버넌스의 계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정치학계에서는 메타거버넌스 논의를 통해서 국가발전전략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행정학계에서 소개하는 일반적 분류는 정부혁신모형인 피터스의 분류, 다양한 학문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 모형을 종합한 로즈의 분류, 정책영역별로 구분하는 경우,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 특정 영역의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이 보건거버넌스, 문화거버넌스, 환경(녹색)거버넌스,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거버넌스(발전 거버넌스를 good governance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등이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연계망에 관한 개념으로, 행위주체들의 연계망에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따라서, 문장의 전후맥락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문 ①은 발전거버넌스가 아닌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이라 해석된다. ㉢ 메타거버넌스는 개별 영역에서의 각 거버넌스들의 조정을 위한 차상위의 거버넌스를 말한다. 메타거버넌스에서는 국가의 위상과 기능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참고로, 조명래 교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로 나누고, 메타 거버넌스를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개별조직과 행위들을 지구적·국가적·지방적 영역에서 통합하면서 그 내부에 개별 행위자들의 조절관계를 포함하는 거시적 구조로 정의한다.

1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 ②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비율
- ③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신임방식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 처리의 비율

정답 ②

집권과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권한배분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기능과 사무배분, 조직과 인사 등에서의 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정도, 재정력과 재정에서의 자율성 정도 등을 통해 확인된다(EBS 푸른행정학, p.912 응용). ②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을 통해서 집권과 분권의 정도를 알 수 있으나, 위임사무 내에서의 비율은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없다.

13 정책결정요인론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후기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도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정책환경이 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을 규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 ④ 정책결정과정은 연구함으로써 정책유형을 도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정답 ④

정책결정요인론의 의미를 안다면, 정답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인지, 아니면 정치(행위자)인지 제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환경이라 답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후에 정치적 요인 또한 중요하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이와 달리, 50-60년대에는 정치요인(특히, 엘리트나 이익집단)을 강조하는 엘리트론과 다원론 논쟁이 있었고, Lowi의 정책유형론은 다원론과 엘리트론 논쟁을 정책유형을 통해 종합하려는 연구다(EBS 푸른행정학, p.275). 이 내용만 안다면, 정책유형론은 정책결정요인론과 관련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쉽게 말해, ③과 ④는 양립불가능한 지문이다.**

정책결정요인론은 초기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생태론), 경제학의 정책결정요인론, 정치학자들의 정책결정요인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EBS 푸른행정학, p.280). 이 중에서 초기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를 정책결정요인론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생태론은 정책결정요인론 이전에 나왔다) 이 문제에서는 배제하고, 정치학자들의 연구 중에서는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V.O.Key도 정책결정요인론 이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 ① 초기 연구라 함은 Fabricant, Brazer의 연구를 말한다.
- ② 후기 연구라 함은 Fabricant, Brazer의 경제학자들의 연구 및 Dawson & Robinson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지칭한다.

14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므로 보편성에 근거한 객관적 업무수행이 용이하다.
- ② 관료제를 합리적 대규모 조직체로 봄으로써 공식적·비공식적 집단의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형 관료제의 운용이 가능하다.
- ③ 관료제 내의 직위를 계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 ④ 전문적 관료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므로 업무가 신속·정확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수행의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②

배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합리성을 띤 조직으로, 계층제·전문화·규칙에 의한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EBS 푸른행정학, p.488). ② 비공식 집단을 간과했으며, 조직구성원 및 비공식 집단의 참여는 합리성을 저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배제한다.

15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단위는 통합 기능팀이며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 ② 부서간 경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 ③ 선발된 조직구성원이 문제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실험조직이다.
- ④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정답 ③

학습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생존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한 조직유형이다.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 활용에 초점을 둔다(EBS 푸른행정학, p.499).

공유된 비전을 전제로, 조직 구조적으로는 기능통합적인 수평적 구조(팀제, TQM 등 ①②④번), 관리에 있어서는 자율과 책임, 인간 중심의 관리, 실수권허용, 그리고 문화적 기반으로 호혜성의 규범(②번)을 강조한다.

② 구성단위간의 지식의 공유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경계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조직은 네트워크 조직처럼 경계가 유동적이며 투과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③ 문제 인지과 해결은 특징인, 즉 선발된 조직구성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16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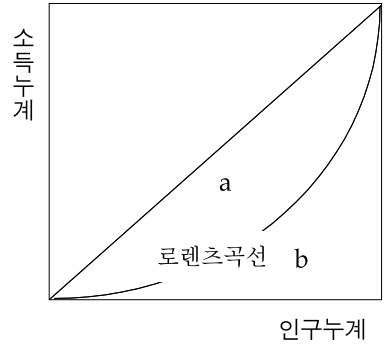
- ① 빈도함수는 소득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이고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이 적은 상황에서 인구와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 ② 로렌즈곡선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요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 ③ 로렌즈곡선이 45° 대각선이 되고, 지니계수가 0인 경우 완전한 소득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④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의 상태를 계수화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을 대각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정답 ④

지니계수와 로렌즈 곡선은 수업 중에 설명한 것으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다만, 이 문제

는 계층을 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①문은 아래 지문들의 전제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도 문풀 때 보았다.

② 로렌츠 곡선은 국가간에 서로 교차하는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니계수가 제시된 것이라는 점도 보았다. ④는 설명이 뒤바뀌었다(EBS 푸른행정학, p.330). 즉,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면적과 나머지 면적의 비율로 계산된다. 완전평등분배 상태의 Gini 계수는 0이며, 완전불평등분배 상태의 Gini 계수는 1이 된다(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소득의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Gini 계수} = \frac{a}{a + b}$$

17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對) 환경적 상호작용은 다원적이다.
- ② 단위관리자가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 ③ 각 구성단위의 의사결정체제는 분권적이다.
- ④ 조직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연계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정답 ③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을 핵심역량을 위주로 합리화하고, 나머지 주요 기능은 다른 조직을 통해 수행되는 형태를 말한다. 네트워크에서는 조정만 행해지고 주요 생산활동은 독립된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된다(EBS 푸른행정학, p.498). ③ 각 단위는 하나의 독립된 행위주체로서 분권적이지만은 않다.

18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구조는 체계적이기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된다.
- ② 조직화된 혼란의 주요 원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 ③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한다.
- ④ 최종의사결정은 간과(oversight) 또는 탈피(flight)보다는 문제해결(problem resolu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답 ④

쓰레기통 모형은 구성원들 상호간에 계층제적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모형이다. 참여자,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의 흐름이 흘러다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결합되며, 정책은 고도의 불합리성을 떨 수밖에 없다(EBS 푸른행정학,

p.337).

④ 합리모형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쓰레기통 모형은 날치기 통과(oversight)나 잔빼기(flight)식으로 이루어진다(EBS 푸른행정학, p.338).

19 직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의 분업정도를 전문화라고 한다.
- ② 비숙련 직무일수록 수평적·수직적 전문화가 낮다.
- ③ 지나친 전문화의 문제점은 직무의 포괄성과 복합적 직무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
- ④ 전문화는 수평적 차원에서 직무의 범위를 결정한다.

정답 ②

①③④는 문제되지 않는다(EBS 푸른행정학, p.482).

② 비숙련 직무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이 보여주는 은유와 같이, 혹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과업표준에서처럼, 세분화되고 관리와 생산 등 수직적으로도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높다. ㉠ 조직 상층부의 전략적 결정은 조직의 모든 기능과 모든 계층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화되지 않고 통합된다. ㉡ 반면, 관리업무는 여러 기능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는 분화보다는 통합적이지만, 수직적으로는 분화되어 있다. ㉢ 팀제나 매트릭스 조직 혹은 유기적 구조에서와 같은 특정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는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지지만 수직적으로는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합된다.

20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 된다.
- ②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난다.
- ③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닌다.

정답 ①

사회자본은 자발적 결사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바, 이는 사회발전에 유용한 사회자본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되는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이러한 호혜성이 창출하는 신뢰가 정치·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EBS 푸른행정학, p.198).

따라서, ① 사회자본은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신뢰와 협력보다는 지배와 순응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사회자본이 결사체 내부에만 작용하는 경우(가족, 연고 네트워크, 마피아 집단) 사회악을 창출하기도 한다. ④ 수직적·권위적 관계에서는 호혜성의 규범이 아닌 순응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며, 상향적으로 형성된다.

특강 안내 : 남부 메이저 팀 공개 특강 : 행정학은 정책학 + 합격생과의 만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3	14	15	16	17	18	19
		행정학	행정학	국어	국어	영어
20	21	22	23	24	25	26
행정법	행정법	한국사	한국사	국어	행정학	영어
27	28	29	30	31		
영어						